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 최상위 소득 비중의 계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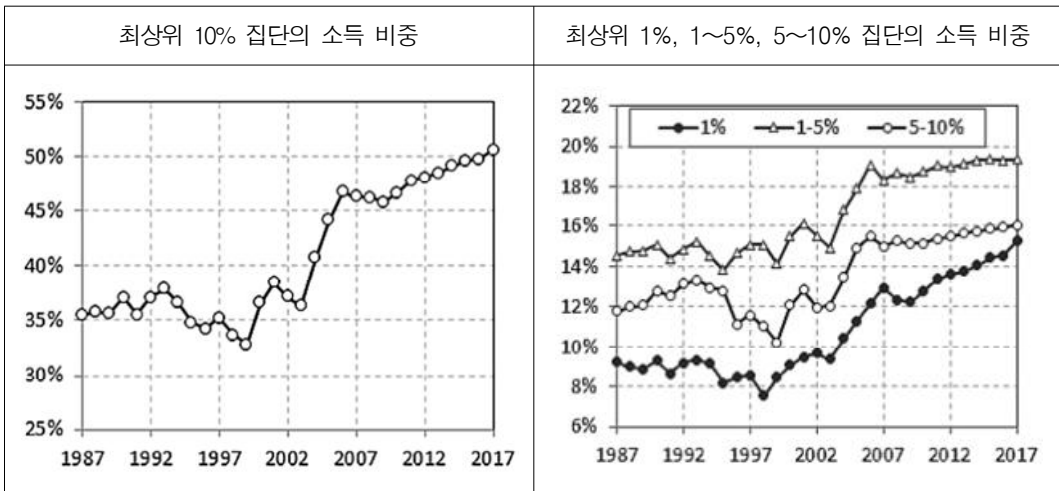
- 자료는 『국세통계연보』
- 소득은 노동소득(임금, 보너스, 스톡옵션), 사업소득, 금융소득(배당, 이자)을 합한 것임.
- 2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 전체 소득은 국민계정 개인부분 순분원소득의 80%

○ 2017년 최상위 1%, 5%, 10% 소득 경계값은 각각 1억 3,571만 원, 7,497만 원, 5,153만 원

○ 최상위 집단의 소득 비중 추세(그림 1, 표 1 참조)

- 2017년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 자본주의 발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 최상위 1%를 제외한 1~10% 집단의 소득비중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완만한 추세
-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9년 12.2%에서 2017년 15.3%로 증가하는 추세
- 최상위 1% 소득비중 증가가 상위 소득 비중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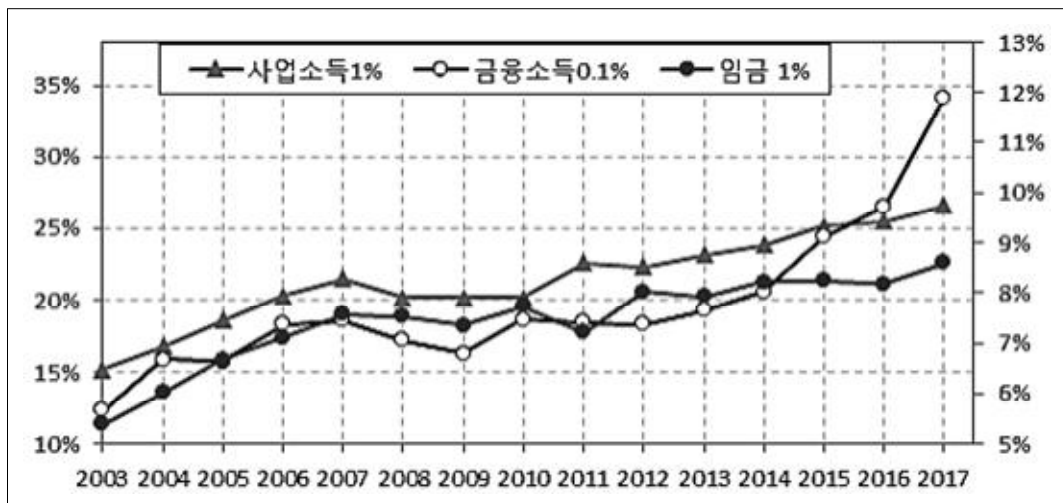
[그림 1]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



〈표 1〉 최상위 소득 비중과 소득경계값

	20세 이상 인구 (천 명)	총소득 (억 원)	소득비중(%)				소득경계값(백만 원)		
			p99-100	p95-99	p90-95	p90-100	상위 1%	상위 5%	상위 10%
2002	33,556	370,107	9.68	15.50	11.96	37.14	63.42	33.0	19.56
2003	34,016	398,980	9.35	14.90	12.05	36.30	55.62	34.1	19.93
2004	34,482	425,799	10.42	16.85	13.43	40.71	71.19	39.2	27.64
2005	34,955	449,422	11.30	17.91	14.92	44.13	79.18	44.9	26.62
2006	35,310	476,103	12.16	19.06	15.50	46.72	91.18	49.0	36.64
2007	35,668	503,289	12.95	18.34	14.98	46.26	90.38	51.4	34.73
2008	36,030	525,296	12.33	18.66	15.24	46.23	95.10	54.1	36.62
2009	36,396	541,509	12.23	18.46	15.13	45.82	96.23	54.8	37.04
2010	36,765	578,751	12.78	18.73	15.16	46.67	100.54	57.9	39.51
2011	37,561	613,421	13.38	19.04	15.38	47.81	107.40	61.1	41.87
2012	38,374	640,330	13.60	18.96	15.50	48.07	103.72	62.9	44.93
2013	39,205	670,158	13.73	19.11	15.64	48.48	110.09	65.6	46.25
2014	40,054	700,770	14.04	19.31	15.76	49.10	116.36	68.4	47.38
2015	40,921	739,488	14.44	19.35	15.86	49.65	122.96	71.5	48.77
2016	41,363	769,795	14.54	19.31	15.95	49.79	128.44	72.2	50.03
2017	41,818	803,976	15.26	19.32	16.07	50.65	135.71	75.0	51.53

〔그림 2〕 사업소득 1%(왼쪽 축), 금융소득 0.1%(왼쪽 축), 임금 1%(오른쪽 축)의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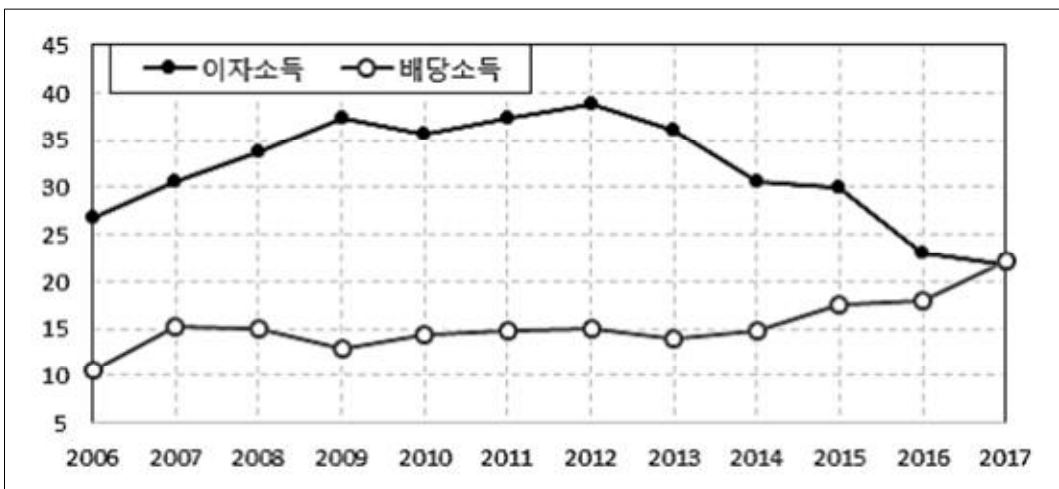


○ 각 소득 항목의 집중도 변화(그림 2 참조)

- 임금 최상위 1% 집단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12년 8.0%에서 2017년 8.6%로 정체 상태
- 사업소득 최상위 1% 집단이 총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2.3%에서 26.6%로 상승함.
- 금융소득 0.1% 집단이 총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8.3%에서 34.1%로 크게 상승함.
- 금융소득 집중도가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유 집중도가 낮은 이자소득 총액이 감소하고, 소유 집중도가 높은 배당소득 총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그림 3 참조).
- 2010년대 이전까지는 임금 불평등이 최상위 1% 소득 비중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대부터는 금융소득(특히, 배당)과 사업소득 불평등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

[그림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총액 : 국세통계

(단위 : 조 원)



○ 계산방법,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ites.google.com/site/hminki00/>을 참고 **KLI**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